
	보 도 자 료	작성과	감사담당관실
	2019년 3월 27일(수) 조간 (3.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양홍주 사무관 김문호
		연락처	044-205-1131 044-205-1137 010-7226-3752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 소극행정 혁파, ④ 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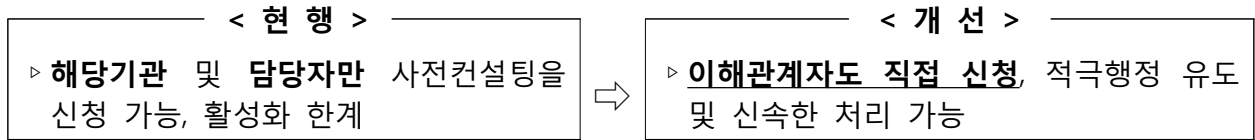
<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 >

- 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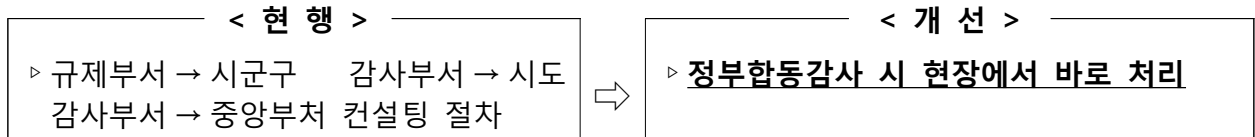
- 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

-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 >

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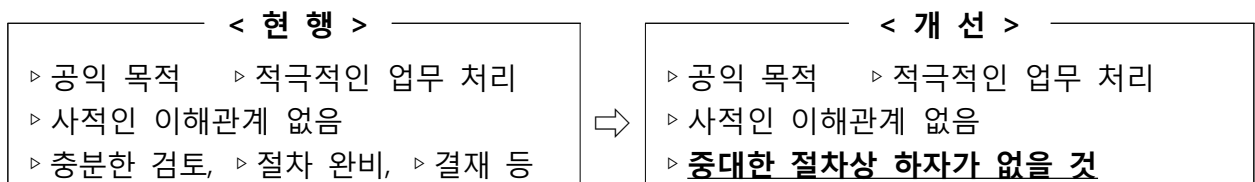
- 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 >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



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

-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 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현 행 >	< 개 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감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신청 ▶ 소극적인 현장면책심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감사자도 직권으로 신청 가능</u> ▶ 적극행정 전담팀 운영 및 감사 현장 창구 운영 등으로 <u>현장면책 활성화</u>

< 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 >

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유형 >

-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 *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 *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 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 >

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 추진배경

- 지방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확실할 경우 규제혁신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국민 불편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

▪ ('19.2.12 국무회의VIP 말씀) “장관 책임 하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하고, 소극행정이나 부작위는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람”

II. 적극행정 저해요인

- 면책요건 엄격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신청절차 및 요건이 복잡
 - 적극행정 면책기준(8개)이 엄격하여 면책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번잡한 절차
- 감사 관행 : 적발 및 실적 위주의 감사 경향
 - 업무상 과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나 컨설팅 감사를 악용하지 않을까 하여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감사 불신 : 사후 면책보다 사전 회피를 택하려는 소극적 행태
 - 감사 및 징계 경험, 동 제도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인지도 부족으로 현 상태 유지 또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의식이 팽배

III. 주요 개선 내용

- (제도 개선) 적극행정 면책 요건완화 및 현장면책제도 도입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 감사 현장에서 면책** 및 심의회 도입
 - *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준 완화(면책기준 8개 → 5개) 규정 개정
 - ** 면책 신청 후 장기간 소요 및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감사현장에서 면책 결정하여 감사 부담 완화 및 이를 위한 현장면책 심의회 도입

- 사전 컨설팅 감사의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신규 반영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담당 공무원이 청구 → 국민도 직접 감독기관에 청구(규정 개정)

** 지자체별 기존 실적 및 규모 등을 반영한 목표치 부여 / 분기별 점검

- (전담팀 신설) 행안부, 지자체에 적극행정 관련 별도 전담팀 운영
- (감사 제외) 4차 산업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은 감사제외
 - 드론 산업 등 신기술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처, 감사제외
- (현장지원 강화) 현장면책 제도 및 컨설팅감사 현장처리 확대
 -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합동감사 시 현장면책 적극 실시 및 감사 담당자 직권면책 신청을 통한 신속처리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시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현장에서 one-stop 처리로 실질적 해결책 제시
- (소극행정 엄벌) 특별점검 강화, 적발시 엄중 문책으로 적극행정 유도
 -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 행태 특별점검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 문책
- (인센티브, 홍보) 공직자의 마인드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 우수 사례 발굴·확산, 우수 사례집 제작 및 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등 감사자,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 소관 부서와 협의, 우수자 특별승진, 마인드 전환을 위한 권역별 교육 실시 등

IV. 향후 추진 계획

- (제도개선)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 개정('19. 3월)
 - * 지자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 **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 (현장지원 강화) '19년 정부합동감사 시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창구 적극 운영(전남,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
- (소극행정 엄벌) 지자체 특별점검·통보(3월~5월), 이행실태 점검(하반기)
- (인센티브·홍보) 공직자 마인드 전환을 위한 권역별 교육 실시('19.4월~)
 - 시·도 감사관(담당) 및 인·허가 담당 등 합동교육을 통해 전파('19.3월~)
 - 우수사례 발굴,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 기관 포상('19년 하반기)

<< 2019년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 >>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는 공직문화 조성

목표

-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의욕 제고
- 규제혁신 등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소극적 행정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해 적극행정 유도

3대 추진 전략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사전 컨설팅 감사
내실화

소극행정 엄벌

2019 중점 추진 과제

적극 행정
제도 개선



- ① 국민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제 도입
- ② 적극행정 면책 기준 완화 및 간소화
- ③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현장 중심
제도 운영



- ① 감사 현장에서 자치단체 현안 One-Stop 처리
- ② 감사자의 직권 면책 신청 활성화
- ③ 자치단체 적극행정 면책 심의회 운영 활성화

적극 행정
기반 조성



- ① 소극행정 및 규제남용 사례 중점 점검
- ② 적극행정 면책 등 징계 처분 완화
- ③ 신산업 분야 감사 제외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 ①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공유
- ② 적극행정 우수자 포상 등 장려
- ③ 자치단체 권역별 교육 실시

대외 협력

- 정부합동감사 참여 관련 중앙부처(one-stop 처리)
- 중앙부처 법령 등 제도 운영 부서
- 지방자치단체 감사 부서